

평화와 군축의 새로운 세기를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19년 1월 26일

민중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분쟁을 근절한다

세계에는 지금 국제적인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세계 평균기온이 4년 연속으로 올라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쟁 등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6850만명을 넘어 난민문제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게다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무역마찰 문제는 지난해 개최한 유엔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많은 국가의 정상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과 함께 유엔이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제가 바로 군축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문서 '군축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발표에서 전 세계의 군비 지출이 1조 7000억 달러를 넘어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뒤로 가장 많은 금액에 달했다며 다음과 같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각국이 다른 나라의 안전보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국의 안전보장만을 추구하면 모든 국가를 위협해 지구규모의 안전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리고 군비지출 총액이 전 세계에 인도적 원조를 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약 80배에 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빈곤에 종지부를 찍고 건강과 교육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

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필요한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지구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활동이 정체될지도 모릅니다.

군축은 유엔 창설 이후 주요과제로 다룬 문제이자 저도 35년 이상 해마다 발표한 제언에서 핵심 주제로 여러 번 제기한 분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한 세대로서, 또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는 신념으로 계속 행동한 도다 조세이(戸田城聖) 참가학회 제2대 회장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많은 민중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분쟁을 근절하려면 군축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고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연대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긴 핵무기금지조약도 2년 전에 채택해 발효를 앞두고 각국은 비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는 말처럼 눈앞에 놓인 위기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로 받아들여 지금이야말로 군축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번에는 21세기 세계의 기축에 군축을 두기 위한 발판에 관해 ①‘평화로운 사회 비전’을 공유 ②‘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를 추진 ③‘청년의 관여’를 큰 흐름으로 만들자는 세가지 각도에서 논하고자 합니다.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평화부재’의 병리를 극복

핵군비확산 경쟁이 재연될 우려

첫째, 발판으로 ‘평화로운 사회 비전’을 공유하자는 제안입니다.

세계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무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형무기를 비롯해 전차나 미사일 등 재래식무기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이 2014년에

발효했지만 주요 수출국이 참여하지 않아 분쟁지역에서 만연하는 무기 사용을 저지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학무기와 같은 비인도적 무기를 다시 사용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또 무기의 근대화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무인항공기(드론) 공격에 시민이 당하는 피해가 늘어 국제인도법 준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¹을 파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조약 준수를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데 만약 조약이 파기된다면 다른 보유국을 비롯한 핵군비확산 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군축어젠다' 서문에서 제기한 '냉전시대의 긴장상태가 더 복잡한 형태로 세계에 다시 출현하고 있다'는 경종이 참으로 강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사태가 21세기에 반복되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탁월한 철학자인 카를 폰 바이츠제커 박사가 일찍이 앞을 예리하게 내다보며 한 말이 떠오릅니다.

박사는 제가 우의를 맺은 로마클럽 명예공동회장 에른스트 폰 바이츠제커 박사의 아버님인데, 세계평화를 위해 행동해온 존귀한 생애를 대담집에서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박사가 냉전종결 후 '베를린장벽'이 붕괴한 1989년부터 독일이 통일된 1990년까지 세계의 움직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정세는 이 1년 동안 크게 보면 극히 일부만 변화를 경험했을 뿐이다.”

¹ 중거리핵전력(INF) 폐기조약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1987년 12월에 서명한 조약으로 사정거리 500~5500km의 지상에 배치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그리고 보유를 금지했다. 냉전종결 후 러시아가 조약의 의무를 계승해 1991년 5월에 대상무기의 전면 폐기를 완료했으나, 최근 INF 배치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의 규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2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INF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물론 동서로 분단된 독일에서 일생을 대부분 보낸 박사는 냉전종결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이 역사적인 일대 사건임에 틀림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한 박사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²과 같은 말을 던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시의 정치, 군사상황을 들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도화된 전쟁을 극복하는 일은 유감스럽게도 현 상황에서 아직 정신의 근원적 변혁이라는 영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패권을 둘러싸고 전투가 반복되는 ‘제도화된 전쟁’을 극복한다는 근본과제는 냉전종결로도 확고한 전망을 열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20세기 말인 현시점에도 군비확산 경쟁을 멈추지 못한 결과 신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과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에도 해당하는 경고로 박사의 깊은 통찰이 느껴집니다. 평화와 군축 문제는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난제로 남아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희망의 서광이 보입니다. 군축 분야에서 국제정치나 안전보장을 바탕으로 논의할 뿐 아니라 인도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대인지뢰와 집속탄 그리고 핵무기와 비인도적 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하나 또 하나 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도법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커다란 흐름인 인도적 접근방법을 발판 삼아 모든 국가가 협력해 군축을 크게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이츠제커 박사의 중요한 고찰

²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문답법으로 질문을 던지거나 거듭 대화하는 속에서 상대가 통념이나 상식에 의문을 갖도록 만들어 올바른 인식이나 진리로 이끄는 접근방식이다. 제자 플라톤이 정리한 대화편 《테아이테토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조산사였던 어머니의 직업에 빗대어 진리를 창출하는 과정을 진통과 분만 등에 비유한 부분이 나온다.

여기서 하나 실마리로 언급하고 싶은 점이 바이츠제커 박사가 군축을 가로막은 배경을 '평화부재'라는 이름의 병리로 탐구한 고찰입니다.

저는 박사가 평화를 둘러싼 문제를 '병'에 비유해 어떤 국가 어떤 사람과도 결코 무관한 과제가 아니라고 전제한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고찰의 밑바탕에는 인간은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생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평화부재를 밖에서 보고 어리석다거나 악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병에 걸린 현상만을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사는 '평화부재는 교화로도 처벌로도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은 치료라고 일컬어야 할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린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환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환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박사이기에 미국과 소련에 이어 영국이 핵개발경쟁에 나선 시대에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사가 중심이 되어 기초를 세우고 다른 학자들과 연명으로 1957년에 발표한 '괴팅겐선언'에는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자국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세계평화를 촉진하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떠한 종류의 핵무기라도 명확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보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은 핵개발경쟁을 지속하는 보유국을 향한 말이라기보다 먼저 '자국의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또 과학자로서 자신들의 연구가 초래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에 모든 정치 문제에 침묵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는 신념을 바탕으로 발표한 도다 회장의 '원수폭금지선언'

삼거화택(三車火宅)의 비유

한편 이 '괴팅겐선언'을 발표한 해에 제 스승인 도다 제2대 회장은 불법자(佛法者)로서 관찰해야 할 신념을 바탕으로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도다 회장은 당시 고조된 핵실험금지운동의 중요성을 들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핵무기를 정당화하는 안전보장의 뿌리에 있는 사상을 단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내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그 권리를 위협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높은 곳에 놓인 핵무기 문제를 모든 인간과 깊이 연관된 '생명존엄'의 지평으로 되돌린 데에 '원수폭금지선언'의 안목이 있습니다.

제가 핵폐기운동에 힘쓰면서 "핵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싸워야 할 상대는 핵무기도, 핵보유국도, 핵개발국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대결하고 극복해야 할 상대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섬멸하는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핵무기를 용인하는 사상'입니다." 하고 주장한 까닭도 그러한 은사의 신념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도다 회장이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1958년 9월, 저는 도다 회장의 사자후(師子吼)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화택을 빠져나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화택은 법화경이 설한 '삼거화택의 비유'를 인용한 말로 거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장자의 집이 갑자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저택이 광대한 나머지 아이들은 위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놀라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가자'는 마음이 들도록 계책을 마련해 화택에서 모두 무사히 구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설화를 인용해 '원수폭 사용은 지구의 자살이자 인류의 자살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는 그야말로 모든 국가의 사람들과 깊이 연관된 위협이고 그 미증유의 위협에 휩싸인 '화택'에서 빠져나갈 길을 함께 고안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쓴 말입니다.

이 설화가 상징하듯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군축어젠다'에서 오랫동안 논의의 핵심을 차지한 '안전을 지킨다'는 관점뿐 아니라 '인류를 구하기 위한 군축' '목숨을 구하는 군축' '미래 세대를 위한 군축'이라는 세가지 관점을 명확히 한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고 '생명을 구제하는 존재'로 석존이 촉구한 대로 삶을 전환

양굴마라를 바꾼 두 가지 전환점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상관없다는 사상에 가로놓인 '평화부재'의 병리를 이겨내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군축을 세계적인 흐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난제를 마주할 때 '병을 치유하는' 접근방법을 중시하는 불법의 관점을 나타낸 것으로서 석존이 재세하던 시대에 고대 인도에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사람들이 두려워한 양굴마라의 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석존을 본 양굴마라가 석존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걸음을 재촉해도 석존 곁에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양굴마라가 멈추어 서서 석존에게 '거기 서라'고 소리치자 석존은 "양굴마라여, 나는 이미 멈춰 있다. 자네가 멈춰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발은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묻는 양굴마라에게 석존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멈추라'는 말은 발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으면서도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그 행동 깊은 곳에 있는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라는 말이다.”

이 말에 감동한 양굴마라는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고 악을 끊기로 결심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무기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석존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후 양굴마라는 석존에게 귀의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깊이 반성하며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 오직 불도수행에 힘썼습니다.

그런 양굴마라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또 하나 찾아왔습니다.

양굴마라는 거리에 나가 탁발을 하다가 난산으로 괴로워하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지만 괴로워하는 여성의 모습이 가슴에 남아 석존에게 가서 그 일을

전했습니다.

석존은 앙굴마라에게 그 여성에게 바로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태어난 이후 고의로 살아 있는 목숨을 빼앗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인해 당신에게 평온이 있기를, 태아에게 안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신이 거듭 쌓은 악행을 알기에 앙굴마라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존은 앙굴마라가 해치려는 마음을 스스로 없애고 깊이 반성해 거듭 수행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켜주듯 앙굴마라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여성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존귀한 길에 뜻을 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뒤 고의로 살아 있는 목숨을 빼앗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 진실로 인해 당신에게 평온이 있기를, 태아에게 안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합니다.

석존의 깊은 마음을 안 앙굴마라는 거리로 돌아가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괴로워하던 여성이 온화한 표정을 되찾고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석존은 앙굴마라에게 무엇을 촉구했을까요.

석존은 앙굴마라를 오랫동안 지배한 해치려는 마음에서 눈을 돌려 악행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서원으로 모자의 목숨을 살리는 길을 비취 ‘생명을 구제하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 설화는 한 사람의 삶이 변혁된 드라마를 그린 것으로 현대와는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나 행위의 금지를 강조할 뿐 아니라 그 행위와는 정반대인 ‘생명을 구제하는 존재’로 내딛기를 촉구하는 방향성은 사회 변혁으로 통하는 치유의 밑거름이 된다고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제네바조약에 담긴 결의

지금부터 70년 전인 1949년에 체결한 국제인도법의 중요한 원칙을 정한 제네바조약에는 이 방향성과 상통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네바조약은 임산부를 비롯해 어린이와 여성, 고령자와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지대 설치 등을 바라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준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교섭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은 조약을 채택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명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장래에 걸쳐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는 제네바조약을 적용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또 각국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늘 여러 나라 간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다시 말해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응징하겠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약 적용으로 많은 인명을 앓아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점에 조약 제정을 이끈 마음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겪은 전쟁의 잔혹함과 비참함을 교섭회의 참석자들도 피부로 느꼈기에 국제인도법의 기반이 되는 조약을 강한 결의로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조약의 원점을 늘 되돌아보지 않으면 조문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든 허용된다는 정당화 논쟁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더구나 현재 인공지능(AI) 무기라 일컫는 ‘자율살상무기시스템(LAWS)’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간이 직접 끼어들지 않고 전투가 벌어지는 분쟁’이 일어날 현실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네바조약으로 결실을 맺은 국제인도법 정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평화부재’의 병리를 극복하는 도전을 앞으로 크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평화부재’의 병리를 서로 인식하며 치유 방식을 함께 모색하는, 다시 말해 ‘평화로운 사회 비전’을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핵무기금지조약의 역사적 의의

저는 이 비전의 골격이 될 정신을 내세운 군축국제법의 효시(嚆矢)야말로 핵무기금지조약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군축 및 인도주의 범주에만 들어가는 국제법이 아닙니다.

국제인도법의 대부라 일컫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장 픽테 전 부위원장은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구

성하는 조문은 '인도적인 관심을 국제법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폭자를 비롯한 많은 민중이 가슴에 품고 있는 '핵무기로 인한 참극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응축한 핵무기금지조약은 그야말로 그 계보를 잇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핵무기금지조약은 새로운 국제법의 방식으로 주목받는 '하이브리드형 국제법'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제기되어 인권이나 강제 이주 문제와 연동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고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조약의 접근방법입니다.

그러한 지구적 과제의 연관성을 더욱 폭넓게 포섭한 조약이 핵무기금지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권에 깊이 관련된 안전보장도 '환경' '사회경제개발' '세계경제' '식량안전보장'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건강' 그리고 '인권'과 '남녀 양성평등'이라는 모든 무게를 감안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과제든 배려하지 않으면 진정한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식의 공유가 밑바탕에 없으면 핵군축 교섭도 보유 대수의 균형에만 관심이 쏠려 군비 관리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핵무기금지조약은 오랜 세월에 걸친 핵군축 정체(停滯)를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는 연대의 고리를 넓히면서 ①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인권'의 세계 ②자타 함께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인도주의'의 세계 ③지구환경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나누는 '공생'의 세계로 가는 길을 힘차게 열어가는 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도감과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우는 '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를

불충분한 상태가 이어지는 인도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

다음으로 군축을 추진하기 위한 둘째 발판으로 '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를 함께 육성하자는 제안

입니다.

‘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는 심각한 위협이나 과제에 맞닥뜨린 사람들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둔 접근방법으로 지난해 8월에 개최한 유엔 홍보국과 비정부기구(NGO)가 모여 실시한 회의의 성과문서에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DGs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접근방법으로써 저는 이 추구가 그대로 군비확산의 흐름을 군비축소로 크게 전환하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군축어젠다’에서 경종을 울렸듯이 세계 전체의 군사비 지출은 증가하는데 인도주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불충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해만 보아도 해마다 2억명 이상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아 문제도 심각합니다. 8억 2100만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영양 부족으로 발육이 더딘 5세 미만 아이는 약 1억 5100만명에 이릅니다.

이 문제를 보면 ‘본디 안전보장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하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엔대학교의 한스 판 힝켈 전 총장이 ‘인간의 안전보장’에 관한 논고에서 한 말을 언급하겠습니다.

힝켈 전 총장은 안전보장은 여러 요인이 연관되어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면 무엇이 위협이고 무엇을 불안하게 느끼는지 명백히 드러난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에게 기존의 안전보장이 개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안도감을 주지 못한 것은 명백하다.”

“국제관계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질병이나 기아, 문맹보다 하이폴리틱스를 앞세우는 태도나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많은 사람에게 ‘안전’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같은 뜻이 되었다.”

‘하이폴리틱스’는 정치상 최우선 사항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기 쉬워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안도감’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힝켈 전 총장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히켈 전 총장은 다른 강연에서 극도로 빈곤한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조차 아니 순간순간의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담긴 기쁨과 의미를 느끼거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내일을 맞기에 급급한 삶이 주된 관심사라면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점에서 기존의 안전보장에서 간과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 괴로운 심정은 빈곤이나 격차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분쟁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난민살이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해를 입어 피난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비롯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아프리카에서 넓혀진 획기적인 난민지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구에서 같이 사는 한사람 한사람이 ‘의미 있는 안도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키우는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 ‘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의 기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전을 제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심각한 문제를 겪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의욕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계기는 2002년 아프리카연합(AU) 발족이었습니다.

인도주의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협력을 모색하면서 7년 전인 2012년에 ‘AU국내피난민조약’을 발효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선구적인 이 조약은 자국 내의 피난민을 보호하는 데 아프리카 전체가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난민지원에도 특필할 만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간다는 남수단 등 분쟁국가에서 피난온 난민 110만명을 받아들이고 이동의 자유와 노동의 기회를 인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집을 짓고 경작할 토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간다 국민은 대부분 분쟁으로 괴로운 난민살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의 심정이 난민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탄자니아에서도 주목할 만한 대처가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는 주변 국가에서 피난온 난민 30만명 이상이 살면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묘목을 재배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땀감을 얻고자 삼림을 벌채함으로써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활동으로 난민캠프와 주변 지역에 나무 약 20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아프리카 대지에 새로 심은 수많은 나무가 우거진 푸른 광경을 떠올리니 제 소중한 벗이자 아프리카에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한 왕가리 마타이 박사가 한 말이 가슴 깊이 밀려옵니다.

“나무는 땅을 치유하고 빈곤과 기아의 되풀이를 단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훌륭한 평화의 상징입니다. 살아 숨쉬는 나무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난민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에서 심은 나무가 삶의 희망이 되어 ‘의미 있는 안도감’으로 이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괴로워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21세기는 반드시 ‘아프리카의 세기’가 된다고 반세기 전부터 계속 외쳐 왔습니다.

전 세계가 바라는 ‘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의 접근방법이라는 아침해가 바야흐로 아프리카에서 떠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맥동하는 ‘동고(同苦)’ 정신이 SGI가 펼치는 평화운동의 원류

무관심과 무자비가 고통을 악화한다

현재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지원하는 난민의 30퍼센트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엔이 지난달 채택한 난민을 위한 글로벌 콤팩트³에도 강조했듯이 많은 난민을 수용한 나라만이

³ 난민을 위한 글로벌 콤팩트

난민을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난민지원과 함께 수용국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난민문제나 빈곤문제만 해도 그 비참함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다'거나 '우리나라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는 이러한 국가의 차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심각한 위협이나 과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접근방법입니다.

저는 불교의 출발점이 된 석존의 '사문출유(四門出遊)' 설화가 이 의식을 전환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인도에서 왕족으로 태어난 석존은 정치적 지위와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추위나 더위로 고생하거나 먼지나 풀, 밤이슬에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왕족으로서 섬김을 받는 환경에서 청년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문 밖을 나온 석존은 늙고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석존은 자신을 비롯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석존은 생로병사의 고뇌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금의 자신과 관계없다'고 여기고 생로병사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모습에 가슴 아팠습니다.

훗날, 석존은 당시를 회상해 그러한 인간심리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늙어가는 존재이고 또 늙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노쇠한 모습을 보면 싫어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혐오한다. 자신도 늙는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말이다."

이러한 말을 통해 석존은 '노쇠'뿐 아니라 '병'과 '죽음'에 대해서도 같은 심리가 작용하기 쉽다고 갈파했습니다. 석존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자신과 무관하다며 혐오감마저 갖는 인간의 심리를 '젊음의 오만' '건강의 오만' '생명의 오만'이라고 훈계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개최한 유엔총회에서 난민지원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적인 지침으로, 난민의 교육기회 확보와 수용국의 인프라 정비 등 난민과 수용국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각국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글로벌 난민 포럼'을 4년마다 개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한 오만을 '인간과 인간이 맺은 마음의 유대'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면 오만에서 비롯된 무관심이나 무자비가 사람들의 괴로움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까요.

어느 시대나 '빈곤은 자신의 운명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이나 자기책임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안겨도 내 알 바 아니다'는 식의 도덕부정론이 횡행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관해 석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괴로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 내재하는 가능성을 개화해 인생을 크게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동고(同苦)하고 다가가 격려하는 연(緣)을 맺으면서 안도감과 희망의 연대를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佛法)의 이러한 관점은 생로병사의 고뇌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승불교 경전인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는 우물을 파고, 과일나무를 심고, 수로를 정비하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이, 몸이 약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자.”

“살던 땅을 잃은 사람을 보면 다가가 위로해 주자.”

이 말들은 자신도 똑같은 괴로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행복도 없고 타인만의 불행도 없다'는 마음으로 '자타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불법 정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기반으로 한 단체(FBO)'로서 평화와 인권, 환경과 인도주의 등 지구규모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펼치는 활동의 사상적 원류도 다른 사람의 고뇌에 '동고' 하는 정신에 있습니다.

석존이 통찰한 노쇠와 병 그리고 죽음을 자신과 관계가 없다며 혐오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차갑게 대해 버리는 심리와 빈곤, 기아, 분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도외시하는 심리는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가 촉구하는 안보관의 전환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앞서 언급한 유엔 홍보국과 NGO가 모여 실시한 회의의 성과문서에 나오는

‘우리 민중은 민족주의 또는 세계통합주의밖에 없다는 잘못된 선택을 거부한다.’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자국 제일주의를 상징하는 듯한 민족주의를 추구할수록 ‘배타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지상제일로 삼는 세계통합주의를 추진할수록 ‘약육강식적’ 경향이 강해지고 맙니다.

그렇지 않고 심각한 위협이나 과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둔 ‘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 접근방법을 모든 나라가 채택해 함께 행동을 일으켜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방위의 역사에는 ‘성벽을 견고하게 쌓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상이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현대에서도 ‘군사력으로 방어한 국경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안전은 확보된다’는 형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적 과제는 대부분 국경을 뛰어넘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가운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지난해 3월, 환경에 관한 권리를 지역 전체가 지킨다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에스카수조약(Escazú Agreement)’을 채택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허리케인으로 발생한 재해, 해양 산성화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약으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 환경문제에 힘쓰는 사람들을 지키고, 중요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의무를 지게 하는 ‘인간중심’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2년 전(2017년)에 시작한 ‘깨끗한 바다 캠페인’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입니다.

현재까지 50개국 이상이 참여해 대상이 되는 해안선은 전 세계의 60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이제까지는 ‘해안선을 지키다’는 방위적인 관점이 전면에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에 ‘국가의 차이를 뛰어넘어 해양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함께 지키다’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현대까지 이어진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이익지상주의로 대표되는 세계통합주의 시발점은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에 대두된 제국주의였습니다.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창가학회 초대 회장은 폭풍우가 휘몰아친 20세기 초인 1903년

에 타국의 민중을 희생시켜 자국의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생존경쟁에서 벗어나 각국이 인도적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요체를 “남을 위하고 남을 이롭게 하면서 자신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공동생활을 의식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중심축의 전환을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의 위기나 환경협력 분야에서 서로 도우며 쌓은 경험은 ‘평화부재’의 병리가 만들어낸 대립과 긴장이 팽배한 황무지에 신뢰와 안도감이라는 푸른 들판을 넓히는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항적인 준비확산 경쟁에서 벗어나는 길도 열리지 않을까요.

오는 9월에는 유엔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가 ‘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를 향해 크게 내딛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같은 지구에 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협력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온난화방지 활동을 강화하면서 안보관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운을 높이는 출발점으로 삼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혁의 파동을 세계에 일으키는 ‘청년의 관여’를 큰 흐름으로 만들자

대학생을 향한 유엔 사무총장의 외침

끝으로 군축을 추진하는 셋째 발판으로 ‘청년의 관여’를 큰 흐름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유엔은 지금 많은 분야에서 청년을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핵이 바로 지난해(2018년) 9월에 시작한 ‘청년(Youth)2030’ 전략으로 전 세계 18억 청년의 임파워먼트(내발적인 힘의 개화)를 추진하면서 젊은 세대가 주역이 되어 SDGs의 활동을 가속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권 분야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실시하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제4단계의 중점 대상을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표한 제언에서 그 방향성을 제시했기에 제4단계 활동이 많은 나라에서 귀도에 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자신이 주도한 '군축어젠다'에서 청년의 역할은 군축 분야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유엔본부처럼 외교관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공부하는 제네바대학교에서 군축어젠다를 발표했다는 사실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학생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은 세계를 변혁할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힘과 연대를 이용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그리고 무기를 관리하고 규제하여, 자원을 모든 사람이 기회와 번영을 위해 사용하는 세계를 추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간절한 기대를 담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핵무기 문제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새로운 기술이 야기할 분쟁의 위험성을 대학생들에게 주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가장 깊이 우려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군사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중요 인프라에 침입해 사회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격 등 많은 시민을 끌어들이며 막대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 군비확산 경쟁은 전투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그 심각성은 평화나 인도주의의 위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 특히 청년에게 끼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군비확산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거대하다는 이유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만연된 '체념'에 근원적인 심각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회 기반을 쪼먹는 만연된 '체념'

'평화부재'의 병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이츠제커 박사가 무엇보다 염려한 부분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박사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평화의 필요성을 외치는 자신의 주장에 관한 비난으로 두 가지 유형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은가. 대규모 무기야말로 평화를 지킨다'는 비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은 어느 시대에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는 비난입니다.

기묘하게도 종종 두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람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는 간단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박사는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순이 왜 일어나는지 고찰했습니다.

계속 주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인간은 그것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작용은 경우에 따라 정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지 모르지만 '생존에 필요한 판단'이 요구될 때는 과연 그것으로 괜찮을까요.

박사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평화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려는 행동을 막아버리지 않을까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고찰에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핵보유국이나 핵의존국에는 핵억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안전보장을 위해 핵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한 '대규모 무기야말로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해 핵 위협에서 눈을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핵문제에 대한 만연된 '체념' 자체가 사회의 기반과 청년들의 미래를 좀먹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핵억지를 바탕으로 한 안전보장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타국과 자국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참사를 불러옵니다. 그뿐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도 핵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부조리가 이어지고 핵무기 방호나 군사기밀 보호가 우선시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정당화할 여지가 늘 남습니다.

거기에 '체념'이 만연되면 자신들에게 자유와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필요악으로 간과하는 풍조가 사회에서 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츠제커 박사가 염려한 '평화부재'의 병리가 초래하는 악영향이 이와 같은 형태로 앞으로 더욱 강해진다면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년들이 건전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는 환경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혹독한 현실을 돌파하는 힘으로

<입정안국론>의 정신

석존 가르침의 정수인 법화경을 바탕으로 13세기 일본에서 불법을 전개한 니치렌(日蓮) 대성인이 <입정안국론>에서 사회가 더욱 혼미해지는 원인으로 보고 척결하고자 한 것도 만연된 '체념'이었 습니다.

당시는 재해나 전란이 잇따라 많은 민중이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체념해버리는 염세주의 사상이나 자기 마음의 평온에만 전념하는 풍조가 사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법화경에 맥동하는 가르침은 그러한 사상과 풍조와는 정반대로서 법화경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훈발과 개화를 통해 만인존엄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합니다.

거듭 일어나는 재해로 의욕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분쟁이나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사회를 어떻게 변혁해야 하는가.

대성인은 이 과제에 철저히 맞서 "저 만기(萬祈)를 수행하기보다는 이 일흉(一凶)을 금해야 할 것이로다."(어서 24쪽) 하고 외치고 '체념'하는 마음을 부추기는 사회의 기반에 깃든 병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성인은 <입정안국론>에서 사회의 혼란이 깊다고 체념하면 안 된다, 인간에게 내재하는 힘을 고집어내어 시대변혁의 파동을 함께 일으키자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성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키구치 초대 회장과 도다 제2대 회장 시절부터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자 행동하는 민중의 연대를 구축하는 일을 사회적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불법의 원류인 석존이 통찰한 괴로움에 관해 '염세적인 분위기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야스퍼스의 저서 중에 '체념'을 이겨내는 방도를 고찰한 것도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맞닥뜨려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한계상황'이라고 이름 붙인 야스퍼스는 '현존하는 우리는 한계상황 앞에 눈을 감는 일만이 그것을 회피할 수 있지만' 회피는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닫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야스퍼스가 한계상황도 한사람 한사람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타개할 실마리가 있다고 통찰한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저마다 출생과 환경이 달라서 그 제약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조건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한계상황을 자각해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결단하면 다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개별적 상황이라는 지금까지의 '좁은 영역'을 본디 자신으로 살아갈 '삶의 깊이'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스퍼스는 '이러한 한계상황에서 객관적인 해결은 영원히 있을 수 없고 다만 그때그때 해결할 뿐'이라며 그러므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행동 한번 한번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존의 길을 열다

이러한 야스퍼스의 외침은 냉전시대부터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고자 행동한 제 생각과 같습니다.

냉전대립이 격화된 1974년에 중국과 소련을 처음 방문한 세계 '종교인이 무슨 이유로 종교를 부정하는 나라에 가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로지 평화를 강하게 바라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중일우호협회, 모스크바대학교에서 받은 초청이라는 기연(機緣)이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우호교류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만능 해결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번'뿐인 만남과 대화라는 마음으로 교육교류와 문화교류의 기회를 하나씩 모색하며 성실하게 쌓았습니다.

냉전종결 후에도 어느 나라의 사람들도 고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심각한 대립관계에 있던 쿠바나 테러 문제에 맞닥뜨린 콜롬비아 등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나 민간인이기에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신념으로 각국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 35년 이상에 걸쳐 평화와 군축을 위해 계속 제언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넓히기 위해 거듭 행동했습니다.

그 큰 목표인 핵무기폐기조약이 실현된 지금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존극한 생명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국제사회의 혹독한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고 여기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에스키벨 박사와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

지난해(2018년) 6월, 인권활동가 아돌포 에스키벨 박사와 함께 전 세계 청년을 대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신념이자 공동성명의 주제인 '또 하나의 세계는 가능하다'를 내걸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전쟁과 무력충돌의 폭력, 굶주림의 폭력, 사회적 폭력, 구조적 폭력으로 생명과 존엄을 위협받고 있다. 처지가 딱한 사람들과 연대해 그 궁핍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리는 양손만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마음도 크게 넓혀야 한다.”

공동성명에서 언급했듯이 그 본보기가 되는 도전이 바로 젊은 세대가 가진 정열과 풍부한 발상력으로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을 후원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활동입니다.

ICAN이 발족한 이래 국제 파트너로서 함께 행동한 SGI도 청년부 멤버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SGI는 2007년부터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 활동을 벌여 일본 청년부를 중심으로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512만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이탈리아SGI도 청년부를 중심으로 '핵무기는 필요 없다'는 캠페인에 협력해 70개가 넘는 이탈리아 도시에서 의식계발을 위한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또 미국SGI는 대학부 멤버들이 2030년까지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우리의 밝은 새 미래'라는 주제로 대화운동을 미국 각지 대학 등에서 활발하게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이 활동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2015년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2250호'에는 청년이 평화구축과 안전보장에 공헌하는 사례를 조사해 안보리와 가맹국에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어 청년부의 활동은 '결의안 2250호'에 관한 진척연구에 언급되었습니다.

청년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SGI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 활동을 총괄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이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핵무기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파동을 넓히고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활력을 주는 파급효과가 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시대변혁이라는 뜻을 불러일으켜 함께 힘을 내는 '공명력(共鳴力)' 발휘에 청년의 진면목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 조기 발효는 물론 그 발효에 앞선 큰 과제, 다시 말해 핵보유국과 핵의존국의 참여를 촉구해 핵무기 폐기를 추진하려면 세계적인 관심과 지지를 일으켜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청년의 강력한 관여가 그 생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군축을 추진하기 위한 세가지 발판을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이 발휘하는 '공명력'이 바로 다른 두 가지 발판을 견고히 다지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국가가 그룹을 결성해 핵무기금지조약 참가를 확대

이어서 평화와 군축을 둘러싼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유엔이 채택한 'SDGs'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핵무기금지조약을 조기에 발효하고 참여 국가를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한 뒤로 지금까지 유엔 가맹국 3분의 1이상인 70개국이 서명하고 20개국

이 기준을 마쳤습니다.

조약 발효 요건인 50개국 비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생화학무기 금지협약과 비교하면 비준국 확대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목할 점은 조약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나라를 포함해 세계 80퍼센트에 가까운 나라들이 조약의 금지사항에 따라 안전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CAN의 국제운영단체 중 하나인 '노르웨이 피플스에이드(NPA, Norwegian People's Aid)'에 따르면 핵무기 개발, 실험, 생산, 제조, 취득, 보유, 비축을 비롯해 이양과 수령, 사용과 그 위협, 위반행위를 돕거나 도움을 받는 일, 배치와 허가 행위를 이미 155개국이 금지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보장'의 길을 나아가고 있기에 이미 핵무기금지조약의 핵심 규범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반을 토대로 조약을 발효하고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핵무기금지에 관한 규범을 보편화하는 방안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반면,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으로 핵문제에 관한 국제 규범인 NPT 협력체제에 깊은 골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조약의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NPT를 결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NPT 제6조에 명시된 '핵군축교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의무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의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은 비준을 위한 노력과 대화의 자리를 확보하는 공헌을

유일한 전쟁 피폭국이 완수해야 할 사명

여기서 저는 핵무기금지조약 채택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각국이 조약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심 있는 나라들을 모아 그룹을 결성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 활동한 'CTBT 우호국' 그룹과 비슷한 형태로 '핵무기금지조약 우호국'을 결성하면 어떨까요.

CTBT 우호국은 일본과 호주 그리고 네덜란드가 2002년에 발족한 그룹으로 2년마다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개최한 제9회 회의에는 약 70개국이 참석했습니다.

특필할 점은 지금까지 외무장관회의에 핵보유국과 핵의존국 그리고 비보유국도 참석해 서명이나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나라가 토의에 가세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토의를 하면서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에 조약을 비준한 나라도 있습니다. 또 비준한 나라가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다른 발효요건국에 조약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비준국이 아닌 미국에서 케리 국무장관(당시)과 페리 전 국방장관이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페리 전 국방장관이 1970년대에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겪은 체험을 말하는 등 핵무기를 둘러싼 교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핵무기금지조약에도 이러한 형태의 그룹을 결성해 조약에 대한 견해 차이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그룹 활동에 일본이 가세해 공헌하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이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고 비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CTBT 우호국의 중심 역할을 맡은 일본이 먼저 '핵무기금지조약 우호국' 결성에 협력하고 조약에 참여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면서 다른 핵의존국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발효 후 1년 이내에 첫 체결국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 회의에 앞서 '핵무기금지조약 우호국' 결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결국회의를 개최하기 전 단계부터 모든 나라에 열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 조약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중개역할'을 맡아온 일본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요.

ICAN의 새로운 활동

핵무기금지조약 교섭이 한창일 때, 일본이 발족을 표명하고 지금까지 개최한 '핵군축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현인그룹회의' 제언에 핵보유국과 핵의존국, 비보유국의 지성들이 나눈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인식을 밝혔습니다.

'핵군축을 둘러싼 정치는 도저히 옹호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견해 차이를 좁히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 모든 관계자는 비록 견해가 다르더라도 핵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협동할 수 있다.'

일본은 이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핵무기금지조약의 제1회 체결국회의를 주최하겠다고 표명한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각국과 협력하여 '핵무기금지조약 우호국'의 활동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이 그룹이 핵무기금지조약을 채택하고자 힘쓴 국제적십자위원회나 ICAN, 평화시장회의(Mayors for Peace)를 비롯해 여러 단체와 연계하면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도 핵무기금지조약 기반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새로 시작한 'ICAN시티즈 어필'이 그 활동입니다.

이미 핵보유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도시가, 또 핵의존국에서는 캐나다와 호주, 스페인의 도시가 'ICAN시티즈 어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ICAN은 이 활동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는 각국 지자체 간 연대를 넓히면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아이캔세이브(ICANSave)'라는 해시태그를 표시해 '우리 도시와 마을 주민들은 핵무기 위협이 없는 세계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활동입니다.

또 세계 163개국 7701개 도시가 가입한 평화시장회의도 모든 나라가 핵무기금지조약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표한 제언에서 조약을 지지하는 지자체의 소재지를 표시한 세계지도를 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세계의 민중은 비도한 핵공격에 대한 응수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전 세계 민중의 뜻을 명확히 나타내 전 세계를 비핵화 방향으로 이끌도록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SGI는 핵무기금지조약 제정을 목표로 지난 2017년까지 추진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민중행동 10년'에 이어 지난해(2018년)부터 '민중행동 10년' 제2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주된 목표는 핵무기금지조약의 지지를 넓혀 '핵무기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확실한 궤도를 만드는 것으로 앞으로도 다른 단체와 협력하면서 조약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대를 강력히 돕고자 합니다.

NPT 재검토회의를 계기로 고도경계태세를 해제하자

제6조 서약을 넣은 경위

둘째, 핵군축의 대폭적인 진척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에 앞서 전면적인 핵군축의 교섭의무를 규정한 NPT를 제정해 발효한 지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바야흐로 191개국이 참여해 군축에 관한 국제법 중에서 NPT가 가장 보편적이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조약을 교섭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비보유국 참여가 극소수에 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62년, 쿠바 위기로 핵전쟁 공포를 통감한 미국과 소련은 당시 5개국으로 확산된 핵을 막기 위해 NPT의 초안을 제출은 했지만 핵군축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 교섭 과정에서 비보유국의 주장을 바탕으로 핵보유국이 완전한 핵군축을 목표로 성실하게 교섭한다는 제6조 서약을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 핵확산에 강한 위기감이 있던 핵보유국에 대해 비보유국이 핵군축 서약을 신뢰하고 다가가 NPT 체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반세기가 지나 냉전시대가 절정이던 시기와 비교하면 핵무기 대수는 줄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는 핵무기 1만 4465발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핵군축조약을 맺은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협의하여 폐기한 핵무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 보유 대수가 아닌 성능면에서 보면 핵무기의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군비를 확산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 점에서 '평화부재'의 병리 문제를 고찰한 물리학자 바이츠제커 박사가 NPT 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인 1967년 7월에 미래를 전망해 우려한 말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협정은 아직 미흡합니다. 잘될 경우에는 새로운 위험 원인의 발생을 막아 공동작업의 훈련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군비를 철폐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볼 경우,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와 함께 현재 상태가 고정되어 버립니다.”

쿠바 위기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두려워한 핵보유국이 25개국으로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를 NPT가 막았습니다.

그러나 핵군축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이츠제커 박사가 우려한 대로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상황을 고착화시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냉전종결 후, 1995년에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할 때 제6조 서약이 그 열쇠를 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때 문서에는 'NPT에 규정된 핵군축에 관한 약속은 단연코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써여 있어 무조건적인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한 재검토회의에서 각국이 제6조의 이행을 계속 요구한 것입니다.

발효 50주년이라는 의미 깊은 내년에 실시하는 재검토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진 정체를 깨기 위해 NPT 제정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제6조 서약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지난해 준비위원회에서 북유럽 5개국이 발표한 성명에 주목했습니다.

이 성명은 INF 폐기조약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힘을 합쳐 NPT의 타당성을 유지, 강화하고 약체화하는 어떠한 조치도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무엇이 각국을 잇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0년에 실시한 재검토회의에서 공통된 인식으로 제시한 '핵무기 사용이 초래하는 인도주의의 괴멸적인 결과에 대한 깊은 염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 이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이자 핵의존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성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ATO 가맹국이 모여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대량파괴무기 군축에 관한 연차회의에서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가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2020년에 실시하는 NPT 재검토회의의 본회의에 앞서 정치선언 채택을 목표로 장관회의를 열어 가능성 있는 선택지를 고려해도 좋지 않겠냐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장관회의에서 정한 선언으로 'NPT의 무엇이 각국을 잇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PT 전문에는 핵전쟁의 위험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핵무기 생산을 멈추고 비축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아울러 여러 나라의 병기고(兵器庫)에서 핵무기 및 그 운반수단을 제거하기' 위해 각국 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씌어 있습니다.

장관회의에서 이 전문의 정신과 '핵무기 사용이 초래하는 인도주의의 괴멸적인 결과에 대한 깊은 염려'를 다시 확인하고 발효 50주년을 고려한 선언으로서 핵군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핵억지가 일으키는 본질적인 위험

그 위에 저는 핵군축의 방향전환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으로 내년에 실시할 NPT 재검토회의 최종문서에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토의하는 유엔 개방형작업반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로 73년 동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최근 핵보유국이나 NATO 사이에서도 핵무기의 군사적 유용성이 저하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냉전종결 전부터 외친 '핵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말이 명백하고, 군사적 유용성 저하에 대한 인식도 넓혀지는 가운데 안전보장을 핵무기에 계속 의존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찍이 바이츠제커 박사가 '원자폭탄이 결코 쓰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위협을 주기 위해 소유하는 것'은 '절벽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는데 지금도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국에 강한 적의가 없어도 핵무기를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하는 한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아 늘 불안정함을 강요당해야 한다는 데 핵억지의 본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법화경에 나오는 '삼거화택의 비유'를 언급했는데 각국의 안전보장정책에서 '핵역지의 본질적인 위험'이라는 불길을 없애는 길을 지금이야말로 함께 선택해야 할 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든 핵보유국이 '안전보장에서 핵무기 역할 축소'를 위해 힘쓰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고도경계태세' 해제는 핵무기의 역할 축소가 가장 긴급한 문제이지만 준비에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핵무기를 즉시 발사할 수 있는 '고도경계태세'를 해제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냉전을 함께 종결시킨 부시 미국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이 1991년에 잇달아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모든 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450기 그리고 원자력잠수함 10척에 탑재된 미사일의 경계태세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에 이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지상 발사용 미사일 500기와 원자력잠수함 6척을 실전 배치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고도경계태세' 해제는 핵보유국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곧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토의를 핵의존국과 비보유국이 함께 유엔 개방형작업반으로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냉전시대와 달리 다른 나라가 핵공격을 가하는 사태는 현실감이 떨어진 오늘날, 많은 나라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우발적인 원인이나 인위적인 작동 오류로 일어나는 핵폭발 사고입니다.

유엔총회에서 2018년 12월에 채택한 '고도경계태세'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175개국이 찬성했습니다.

그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고도경계태세' 해제에 착수하는 실천은 핵보유국에도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삭감방침을 정하는 제4회 군축특별총회를 개최하자

합의 형성에 열의와 양보가 반드시 필요

이러한 위험의 축소를 '수평적 군축'이라고 부르는데 그와 더불어 핵무기 보유 대수를 실제로 줄이는 '수직적 군축'의 진척이 NPT 제6조 의무에 비추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내년에 실시하는 NPT 재검토회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2021년에 유엔 제4회 군축특별총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4회 군축특별총회에서 다국간 핵군축 교섭의무를 재확인하고 핵무기를 대폭 삭감하고 핵무기 근대화의 동결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한 다음 2025년에 개최하는 NPT 재검토회의를 목표로 다국간 핵군축 교섭을 시작할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군축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978년에 제1회 군축특별총회를 개최했을 때도 많은 나라가 핵군축을 바라면서도 교섭에는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합의안 초안을 잡아도 각국이 잇따라 의견을 내어 이론(異論-다른 논의)의 여지가 있는 곳에 '괄호'를 넣기만 하고 해소하지 않아, 합의가 암초에 걸려 결의안이 보류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급거 교섭 총책임자로 지명된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 멕시코 전 외무장관이 각국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새로운 괄호를 너무나 쉽게 추가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신사협정을 하기 바랍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넬로페가 직물을 짜다 다시 풀기를 반복하는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훗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 전 외무장관이 힘쓴 결과, 최종적으로 모든 '괄호'를 해소하여 최종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최종문서는 현재에도 군축문제를 토의할 때 기초가 되고 있는데 제4회 군축특별총회에서도 각국이 열의와 양보로 핵무기를 비롯한 많은 무기의 군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4회 군축특별총회를 개최할 때는 시민사회 대표가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유엔총회에서 시민사회 대표의 발언이 처음 실현된 때는 제1회 군축특별총회였습니다. NGO 25곳과 연구기관 6곳의 대표가 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저도 제1회 군축특별총회에 즈음해 제언을 발표한 외에도 제2회 군축특별총회(1982년) 그리고 제3회 군축특별총회(1988년) 때에도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또 SGI로서 제2회 군축특별총회 때는 '핵무기 위협전'을 유엔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원폭피해의 실태 등을 소개한 전시가 반향을 일으켜 특별총회에서 '세계군축캠페인'을 채택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그 뒤로 SGI는 군축교육도 추진했습니다. 제4회 군축특별총회를 개최할 때는 군축교육에 관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사회로서 발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비인도적이고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AI무기를 조약으로 금지

안전보장환경을 일변시키는 위험성

셋째, AI무기 또는 킬러로봇이라 일컫는 'LAWS'를 전면 금지하는 조약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LAWS는 몇몇 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단계로 실전 배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투행위를 자동화하는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일단 발생하면 핵무기 탄생에 필적하는 세계의 안전보장환경을 일변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대한 한계선이 매우 낮아져 국제인도법 정신이 현저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엔 '군축어젠다'에서 지적한 LAWS 특유의 문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무인 공격기로 사용한 'V1로켓'부터 지금도 매설된 지역이 남아 있는 '대인지뢰'까지 인간이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무기를 개발해 사용했지만 LAWS에는 그러한 무기와 전혀 다른 위험성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AI가 조작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행동이나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늘 안고 있습니다.

저도 일찍이 평화학자 케빈 클레멘츠 박사와 나눈 대담에서 지난 2014년에 유엔이 LAWS 규제를 둘러싼 비공식 전문가회의를 처음 개최했다는 소식을 듣고 LAWS 위험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양심의 가책도 망설임도 없이 자동으로 공격을 가하는 로봇무기에는 인도적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전면으로 규제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개발과 배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멘츠 박사도 NGO가 추진하는 '스톱 킬러로봇'⁴ 운동을 말하면서 "시민사회가 펼치는 이러한 운동이나 유엔 사무국 그리고 각국의 외교관계자 등 광범위한 행동주체가 적극적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커다란 열쇠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제출한 SGI 성명

지난해 4월에 개최한 정부전문가회의에서는 대다수 국가가 '무기 사용에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26개국이 LAWS 전면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유엔이 '군축어젠다'에서 경고한 점과 각국이 정부전문가회의에서 표명한 우려를 바탕으로 'LAWS 금지조약' 교섭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본도 지난해 2월,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자율형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유럽의회가 국제적인 규제의 틀을 정하는 교섭회의를 서둘러 시작하

⁴ 스톱 킬러로봇(Stop Killer Robots)

킬러로봇(살상로봇) 등의 '자율살상무기시스템(LAWS)' 개발과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2013년 4월에 발족했다. 인권 비정부기구(NGO)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가 조정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퍼그워시회의 등의 많은 NGO가 활동에 참여했다. SGI도 멤버로 등재되어 있다.

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스톱 킬러로봇' 활동에 참여하는 NGO가 51개국 89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SGI도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대표가 참석해 성명 2건을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신앙을 기반으로 한 14개 단체와 개인이 연명으로 제출한 '종교커뮤니티 공동성명'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의 중요성과 더불어 LAWS를 금지하기 위한 다국간 의논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SGI가 독자적으로 제출한 성명으로 LAWS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생명권'과 '인간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존엄에 관한 원칙'을 현저히 위협하는 존재임이 틀림없다고 경고한 내용입니다.

만약 LAWS를 규제하지 않은 채 실제로 사용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분쟁의 성격은 틀림없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찍이 드론무기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듯 공격하는 쪽과 공격받는 쪽의 인간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 단절성'과 더불어 실제로 전투행위가 공격을 의도한 사람과 완전히 분리되는 '윤리적 단절성'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츠제커 대통령의 전쟁체험

군사적 위협의 심각성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윤리적 단절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통일 독일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초대 대통령이 자신의 체험이라며 소개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독일이 통일하고 8개월이 지난 뒤인 1991년 6월, 물리학자 바이츠제커 박사의 남동생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과 독일이 경험한 '단힌 사회'의 위험성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러한 체험을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은 서독 국회의원 시절인 1973년에 소련을 처음 방문해 레닌그라드(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묘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포위되어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이 잠든 곳이었다.

그날 저녁 회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소련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자신도 그때 포위전에 참전한 독일 병사 중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장내가 침묵으로 감싸인 가운데 대통령은 다음 말을 이었다.

“우리는 모든 전선, 그중에서도 레닌그라드 시내에서 겪은 고통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결코 자손들이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완수하고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솔직한 이야기에 처음에는 침묵하던 소련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어 따뜻함마저 감도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반면 앞으로 분쟁지역에서 LAWS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 과거와 같은 이러한 적과의 대면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이 관여한 행위에 대한 '깊은 회한'과 분쟁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로운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바라는 '한 인간으로서 다진 결의'가 들어갈 여지가 그곳에 있을까요.

저도 대통령이 소련을 처음 방문한 이듬해인 1974년 9월에 레닌그라드에 있는 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평화를 향한 서원을 담아 기원했습니다.

소련에서 머무른 마지막 날 코시긴 총리와 회견하는 자리에서 묘지에 헌화한 일을 전하자, 총리는 포위 전 당시의 괴로움을 떠올리듯 “그때 저도 레닌그라드에 있었습니다.” 하고 말한 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코시긴 총리와 흥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 착수하려면 먼저 전쟁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던 코시긴 총리의 진지한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이츠제커 대통령과 소련 사람들이 나눈 마음의 교류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깊이 느꼈습니다.

또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겪은 선명하고 강렬한 기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선 양측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는, 결과적으로 서로 매우 비슷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긴 대열로 소리 없이 행진할 때였다. 갑자기 반대편에서 매우 조용히 대열이 다가오고 있었다. 상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러시아 사람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양쪽 모두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는 침묵한 채로 서로 부상을 입히지 않고 지나쳤다. 상대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부동켜안고 싶은 심정이었다.”

AI가 제어하는 무기가 적군과 아군으로 갈린 상대에게 복잡한 심정이나 ‘냉정함’이라는 말에 담긴 인간성의 무게를 느껴 잠시라도 전투행위를 멈출 수 있을까요.

물론 LAWS 규제에서 국제인도법의 법적인 관점, 다시 말해 ‘민간인 보호 원칙’을 비롯해 전투원 일지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수단과 방법을 금지한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 인도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새로운 무기 검증 의무’ 등에 따른 논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바이츠제커 대통령의 고백에서 드러난 사례처럼 LAWS에 잠재된 ‘윤리적 단절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LAWS는 핵무기와는 다른 의미로 공격받는 국가에도, 공격하는 국가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LAWS 금지를 요구하는 국가들과 일본처럼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국가들이 ‘스톱 킬러로봇’의 활동에 참여하는 NGO와 협력하여 LAWS의 개발과 사용을 비롯해 전면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서둘러 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엔의 특별대표를 임명해 수자원을 지키는 체제를 강화

세계 인구 40퍼센트 물 부족에 직면

이어서 넷째, 유엔이 추진하는 SDGs와 관련한 수자원 보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엔이 내건 SDGs에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1억명이 안전한 물을 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40퍼센트가 물 부족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행동의 변화로 물 수요는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하천은 폐수의 영향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물 순환에 영향을 미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강우량이 더욱 증가하고 건조한 지역에는 더욱 건조해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물 위기를 극복하고자 유엔은 지난해 3월, 국제행동 10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통칭 '물의 국제행동 10년'⁵)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유엔총회 개막식에서 마흐무드 사이칼 부의장이 세계적인 물 부족의 영향이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갈증을 참거나 자신이 마신 물로 병에 걸릴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자신의 존엄과 안전이 위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물을 구할 수 없어 6억명이 넘는 사람이 정비되지 않은 우물을 비롯해 연못이나 강, 호수 등에서 물을 길어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오랜 시간 무거움을 참고 견디며 물을 길어 날라야 합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물 때문에 병에 걸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일은 빈곤이나 격차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건강상의 불안이나 물 운반에 따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기본적 인권'과 깊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민하는 일 없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선진국 사람들도 갑자기 재난을 당하면 그 고마움을 크게 실감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에 관한 권리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나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기되었을 뿐 아니라 2010년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결의안에 '생명을 비롯한 모든 인권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

⁵ 물의 국제행동 10년

수자원의 지속가능발전과 통합적인 관리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물에 관한 목표달성 등을 위해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활동이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추진한 '국제 식수공급 및 위생 10년'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생명을 위한 물 국제행동 10년'에 이은 물에 관한 제3차 국제행동 10년이다.

건'으로 자리 잡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SDGs의 주요 목표이자 인간의 생명과 생활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기반인 안전한 물의 확보를 국제적인 규모로 추진하고자 유엔에 '수자원담당 특별대표'라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유엔에는 수자원 문제에 특화된 전문기구도 없지만 유엔 물기구(UN Water)라는 수자원 문제에 관한 국제기구 30여곳으로 구성된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 임명한 수자원담당 특별대표가 유엔 물기구에 속한 여러 기구와 힘을 합하고 성공사례 공유를 비롯해 기술이전에 관한 우호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각국에 촉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대책 중 하나로 수자원담당 특별대표를 중심으로 '물의 국제행동 10년에 관한 유엔 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자고 아울러 제안합니다.

유엔과 세계은행이 소집하여 11개국 정상들이 '물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패널회의'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도 이러한 회의를 해마다 또는 격년으로 열자고 제창했습니다. 유엔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제가 앞서 논한 '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 접근방법을 수자원 분야에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포르투갈 총리 재임 기간에 성립한 스페인과의 수질관리협약을 비롯해 인도와 파키스탄, 볼리비아와 페루의 사례를 들어 물이 '분쟁이 아닌 협력을 촉구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는 국경을 접한 하천과 호수 유역이 286개이고 국경을 넘는 대수층도 592개를 헤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경하천으로 유역에 접한 30퍼센트에 가까운 국가들이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월경하천도 특별대표와 유엔 물기구에 속한 여러 기구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보호를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이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살려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국가들을 지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물의 재사용을 도모

수자원 문제에 관한 또 한가지 제안으로 담수자원이 장차 부족하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물의 재사용'과 '해수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수자원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이 있는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헌했으면 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수자원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많은 나라에 인프라 정비나 인재육성 등 하드와 소프트 양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근년 물과 위생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원조국이 되었습니다.

또 일본에는 수자원 분야에서 오랫동안 한국, 중국과 기술을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과는 1978년부터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과도 1985년부터 교류회의를 거듭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도 열어 3개국이 경험을 공유하고 수자원 문제에 관한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수자원 문제 개선과 지역 간 신뢰양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국, 중국과도 연계하는 형태로 '물의 재사용'과 '해수의 담수화' 수요가 높은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지원하기를 제안합니다.

오는 8월에는 요코하마에서 제7회 아프리카 개발회의⁶를 개최합니다.

6년 전에 개최한 제5회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의 약 1000만명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수도기술자 1750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그 방안을 강화하고 '물의 재사용' '해수의 담수화'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추진할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일본은 안전한 물이 풍부하게 잘 갖춰진 나라이지만 지난해 세계위험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재해를 입기 쉬운 나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⁶ 제7회 아프리카 개발회의

일본이 주도하는 형태로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한 국제회의. 올해 8월 요코하마에서 일곱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번 회의는 2016년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인의식'과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중요성을 제창했다. 아프리카의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이나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도 의논에 참여하고 있다.

재해 시에 절실하게 필요한 물품이 바로 안전한 물이기에 일본은 그러한 면에서도 안전한 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간중심의 다국간주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의 웃는 얼굴이 번지는 임파워먼트

SGI도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물의 국제행동 10년'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일상 생활에서 수자원 문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여성에게 초점을 맞춰 '생명을 지키는 물과 여성'전(가칭)을 앞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수도설비가 집 주변에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국가의 어린 소녀를 비롯한 여성들이 1년간 물을 길는 데 쓰는 시간이 약 400억 시간에 달해 그 부담이 엄청납니다.

물을 길으러 가는 길은 위험한 곳이 많고 무거운 물을 매일 옮기다 몸을 다치는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한 물을 확보하는 환경이 갖춰지면 그러한 문제가 개선될 뿐 아니라 여성이 그 시간을 다른 일에 사용하고 많은 소녀가 학교에 다닐 수 있어 여성의 임파워먼트(내발적인 힘의 개화)로 이어지는 길이 열립니다.

전시에서는 여성을 둘러싼 이러한 상황과 함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습도 다루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그 사례 중 하나로 타지키스탄에 사는 한 여성의 행동을 소개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을 잃고 다섯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강에서 물을 길어 오기 위해 몇 시간이고 걸어야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물 때문에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절망할 때 그 여성은 우인과 그룹을 만들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NGO의 지원을 받고 마을 사람들도 총동원하여 14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수도관을 끌어온 결과 마을 사람 3000여명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승리입니다. 우리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 싶습니다. 작은 농원이나 온실을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성들의 웃는 얼굴이 SDGs의 전진을 무엇보다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물의 국제행동 10년’ 개막식에서 시민사회 대표로 열세살 소녀가 발표했습니다.

어텀 펠레티에 소녀는 캐나다 원주민으로 물과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펠레티에는 “아이들이 깨끗한 물이 무엇인지,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라면 안 됩니다.” 하고 강조하고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서로 내발적인 힘을 개화할 때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SGI도 수자원 보호를 통해 인간과 지구를 지키는 행동의 연대를 시민사회에 넓히고자 ‘생명을 지키는 물과 여성’을 주제로 전시를 개최해 수자원 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결심입니다.

SDGs 달성을 목표로 세계의 대학 협력을 촉진

17개 목표를 담당할 중심거점을 발표

끝으로 다섯째, 세계의 대학을 SDGs의 추진거점으로 정하는 흐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유엔과 세계의 대학이 연계를 맺는 ‘유엔 아카데미임팩트(UNAI)’를 2010년에 발족한 뒤로 약 140개국 1300개에 달하는 대학이 가맹했습니다.

이 아카데미임팩트가 지난해 10월, 주목해야 할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이 정한 SDGs의 17개 목표 각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세계의 17개 대학을 선정해 ‘허브(중심거점)’ 역할을 담당할 대학으로 임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2 ‘기아퇴치’로는 남아공의 프리토리아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프리토리아대학교는 식량문제와 영양에 관한 연구소를 두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연구를 추진하고 그 밖에도 식량안전보장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수년간 공동개최했습니다. 수업도 SDGs의 여러 지표에 맞춰 모든 학부의 교육과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표5 '양성평등'으로는 수단의 아파드여자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지역과 나라에서 활약할 여성을 목표로 교육하는 대학으로 '양성평등과 개발' '양성평등과 평화연구' 등 양성평등을 전문으로 하는 석사과정을 4개 개설하고 있습니다.

목표16 '평화와 공정'으로는 영국의 드몽포트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난민, 이주민과 공생을 목표로 하는 유엔 캠페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대학으로서 젊은 난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서 난민, 이주민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성을 주장하고 난민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SDGs 17개 목표

SDGs는 2015년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성과문서 '우리 세계를 변혁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에서 명기한 국제적인 목표다. 17개 목표를 내건 기한은 2030년으로 이 목표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본디 두 가지 조건을 통합하여 만들었다.

하나는 2000년부터 2015년에 국제사회 공통목표로 내건 새천년개발목표(MDGs)다.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빈곤을 없애기 위한 목표다. 다른 하나는 1992년부터 지구서밋에서 발단한 지구환경을 지키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두 가지를 통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만들었다.

MDGs는 개발도상국의 목표인 반면 SDGs는 선진국도 포함한 '보편적'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의 안정과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발전을 촉구하는 '통합적' 측면과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포괄적' 측면도 있다.

또 SDGs는 목표를 검토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원주민이나 여성그룹, 청년그룹 등이 참여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모든 형태의 빈곤종결' 목표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환경 등 지구상 모든 빈곤을 대상으로 한다.

1 : 모든 형태의 빈곤종결

- 2 :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 3 :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 4 :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제공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 5 : 양성평등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 6 :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 7 :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 8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 9 :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 10 :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 11 :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 13 :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 14 :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 15 :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증진,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법제도 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 17 : 이 목표들의 이행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

일본의 대학으로는 목표9 '산업과 기술혁신' 분야에서 나가오카기술과학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 17개 대학이 임기 3년 동안 선정된 각 분야에서 SDGs가 내건 목표를 견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홍보국에서 아카데미임팩트 책임을 맡은 라무 다모다란 의장은 '학문은 타인을 이롭게 하고 대학생은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SDGs에 힘쓰는 대학만큼 이 조합이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저도 대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대학은 '희망과 안도감을 주는 항구'로서의 힘을 갖추고 있어 그 힘을 인류 이익을 위해 발휘하는 의의는 매우 큼니다.

그래서 저는 이 17개 대학을 중심으로 'SDGs 지원의 깃발'을 힘차게 내건 대학의 연대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카데미임팩트에 가맹한 대학을 비롯해 많은 대학이 중점을 둔 SDGs의 목표를 표명하고 의욕적으로 캠페인을 펼치면 어떨까요.

또 같은 분야에 힘쓰는 대학이 서로 협력해 대학생의 국제적인 연대를 넓히는 의의를 담아 유엔 창설 75주년을 맞는 내년에 'SDGs를 위한 세계대학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년의 역할을 중시하는 유엔의 '청년 2030' 전략에서는 창설 75주년 등으로 유엔이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 청년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유엔 사무총장과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국 교육자와 대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세계대학회의를 개최해 SDGs를 추진하는 기운을 높이고 '유엔 사무총장과 대학생의 대화포럼'을 실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카대학교와 미국소카대학교(SUA)의 의욕적인 활동

지금까지 저는 소카(創價)대학교 창립자로서 '대학교류 추진'에 힘을 쏟으면서 세계 여러 대학 총장과 '대학의 사회적 사명'을 주제로 거듭 대화했습니다.

17개 대학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와도 교류했습니다. 오랫동안 총장을 역임한 오스칼 슈베로프 박사와 만났을 때 제 오랜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 간 교류'로 전 세계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대화와 상호이해야말로 무언가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이상의 방향성'이 창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슈베로프 박사는 “세계의 대학은 공통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하고 공감하면서 '교육자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손길을 뻗어야 한다'고 말한 신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소카대학교는 아카데미믹임팩트의 일원으로서 활동의 기둥인 10원칙 중 '세계시민의식을 높인다' '평화와 분쟁해결을 촉구한다' '빈곤문제 해결에 힘쓴다' '지속가능성을 추진한다' '다른 문화 간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불관용을 없앤다'는 다섯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SDGs를 시작한 2016년 이후로 유엔 난민기구와 '난민고등교육프로그램' 협정을 맺어 난민 대학생을 받아들이고 유엔 개발계획(UND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의 협정에 조인해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수업으로는 SDGs와 관련이 깊은 평화, 환경, 개발, 인권 분야인 '세계시민교육과목'을 지난해 개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 조성을 비롯해 SDGs에 관련 있는 여러 연구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소카대학교(SUA)도 지구규모의 과제에 관한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반별로 공동연구와 현지조사를 하는 '러닝 클러스터(Learning Cluster)'라는 전통 교육프로그램과 뉴욕 유엔본부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유엔이 정한 '국제 비폭력의 날'에 맞춰 2014년부터 해마다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2006년에 발표한 유엔제언에서 세계의 대학이 사회적 사명 중 하나로 '유엔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엔의 미래도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대학생이 나 대학이 '점'이 되고 그것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선'이 되어 이윽고 유엔지원의 테두리라는 '면'이 지구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대학의 네트워크 형성은 아카데미믹임팩트를 통해 세계 1300개 이상의 대학으로 넓혀졌습니다.

이번 거점대학 발표를 새로운 계기로 삼아 세계의 더 많은 대학이 SDGs 추진을 위해 더욱 힘을 쏟아 각자가 쌓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지구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행동 연대를 굳게 다져야 하지 않을까요.

세가지 기둥을 축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을

SGI도 유엔을 지원하는 활동의 기둥으로 정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SDGs를 추진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SGI는 지구규모의 과제에 관한 전시를 주로 세계 각지 대학에서 개최했는데 그중 거점 대학으로 선정된 노르웨이의 베르겐대학교에서도 개최했습니다.

대학이야말로 문제해결을 위해 영지를 결집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기르는 요람입니다. 시대를 변혁하는 강력한 에너지는 청년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이 만들어낸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인권활동가 에스키벨 박사와 공동성명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단상에서 받은 사람도 대학생 두 사람이고 이튿날 공동성명을 둘러싸고 '청년 모임'을 개최한 장소도 로마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저는 박사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청년 임파워먼트'를 추진할 것을 제창하고 그 기둥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 ① 비참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의 기억'을 가슴에 새기고 공통의식을 기른다.
- ② 지구는 본디 인간이 '함께 사는 집'이고 차이에 따른 배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배운다.
- ③ 정치나 경제를 '인도적 방향'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영지를 연마한다.

앞으로도 세계의 대학들과 깊이 연계하면서 SDGs에 관한 의식을 계발하는 전시 등을 개최해 이 세가지를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저변을 착실히 넓히고자 합니다.

로마 대학가에서 '청년 모임'을 개최한 6월 6일은 신기하게도 마키구치(牧口) 창가학회 초대 회장 탄생일이었습니다.

창가학회와 SGI의 원류에는 마키구치 회장의 교육사상이 담겨 있는데 그 요체를 이루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관을 명확히 이해한 다음에 구축한 교육이야말로 이윽고 전 인류의 모순과 회의(懷疑)를 극복하고 인류의 영원한 승리를 의미한다."

SGI는 이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청년 임파워먼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존엄을 빛내며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지구사회'를 건설하는 데 힘을 결심합니다.

참고문헌

1. 유엔 홍보센터 홈페이지
2. 〈군축어젠다 우리의 공통적인 미래를 지킨다〉 〈세계〉 2018년 11월호 수록, 이와나미서점
3. 《자유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1989~1990》 카를 폰 바이츠제커 저, 고스기 가쓰지 옮김, 아라카키 세이쇼, 미네르바서방
4. 《마음의 병으로서의 평화부재》 카를 폰 바이츠제커 저, 도야마 요시타카 옮김, 남운당
5. 《바이츠제커 가문》 마르틴 바인 저, 스즈키 다다시/ 야마모토 유/ 스즈키 요코 옮김, 평범사
6. 《도다 조세이 전집 제4권》 세이쿄신문사
7. 《세계의 명저1 바라문교전 원시불전》 나가오 가진 책임편집, 중앙공론사
8. 《전쟁과 국제인도법》 이노우에 다다오 저, 동신당
9. 〈소외, 인간존엄, 책임〉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보고서〉 수록
10. 《피스 우먼》 앙겔리카. U. 로이터/ 안네 루퍼 저, 마쓰노 야스코 / 가미우라 미치히토 옮김, 에이지출판
11. 《고타마 붓다 I》 《나카무라 하지메 선집(결정판) 제11권》 수록, 춘추사
12.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2권》 제삼문명사
13. 《니치렌 대성인 어서전집》 24쪽, 세이쿄신문사
14. 《불타와 용수》 카를 야스퍼스 저, 미네시마 히데오 옮김, 이상사
15. 《실존해명》 카를 야스퍼스 저, 구사나기 마사오 옮김, 시다 쇼조/ 창문사
16. 《현자 가르시아 로블레스 전기》 기노시타 이쿠 저, 사회평론사
17. 《평화의 세기를 향한 민중의 도전》 우시오출판사
18. 《바이츠제커 회고록》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저, 나가이 기요히코 옮김, 이와나미서점
19. 유엔 여성기구 일본사무소 홈페이지
20.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8권》 제삼문명사